

새 정부 ‘국민추천제’ 성공하기 위해선

기고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의욕적으로 시행한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주변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인재DB에 수록하는 국민참여형 선진인사시스템이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선에 국민들의 추천을 받기로 하면서 큰 호응과 참여 열기가 뜨겁다. 기존 밀실 인사나 낙하산 인사 등 각종 인사 논란을 피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과 인사제도라는 점은 파격적으로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추천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 장·차관 등 고위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첫날 하루에만 1만1324건이 접수됐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돼 뜨겁다. 이 중 9900여 건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을 통해, 1400여 건은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추천이 몰린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복지 정책을 잘 펼칠 인재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사제도라는

정부의 선의와 달리 시행 초기부터 많은 부작용을 드러냈다. 추천된 당사자의 자질·역량과 무관한 집단의 ‘인기투표’와 ‘조직 동원 추천’으로 전략해 양질의 인재가 추천되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집단 상호·계층 간 경쟁 과열과 갈등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노동, 직능, 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있다. 제도의 취지와 철학에 공감하지만 기득권 세력과 정치인들의 등용 발판이 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추천제를 본질적으로 포퓰리즘으로 보는 일부 시각과 폄훼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다. 다만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된다.

첫날 접수 건만도 1만1천여 건에 달한다. 접수 기간 1주일을 감안한다면 총 접수 건은 최소 몇 만 건을 넘을 것이다. 검토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도 불가능하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선별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벤트성 행정이나 회의론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추천하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인기투표로 전략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와 문제 지적도 나온다. 정치적 풍자나 인기몰이에 국민적 유희가 복합적으로 얹힌 모습으로 바라보는 평가도 있다. 호남 인사의 새 정부 등용에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호남 당원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조차 호남 선출직 최고위원 도전자들은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선거 때마다 이어진 물갈이 여론으로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과 고위 관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도 국민 인사 추천에서는 약점으로 꼽힌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민추천제가 국민에게 신뢰받고 성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재가 응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추천부터 임명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인재가 걸러지고 자정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역량과 자질, 전문성, 도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국민추천제의 성과와 평가를 통해 지속적 실행 여부와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초 국민 참여 확대라는 취지와 큰 호응과 달리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허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이런 논란에 대해 추천된 인물의 역량과 자질,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단순히 국민에게 보여주는 이벤트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 모두 유능한 ‘진짜 인재’를 발굴하고 등용하는 계기가 돼, 성공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6일(현지시간) 텔아비브 동쪽 브네이브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 현장에서 한 소년이 잔해 속을 지나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석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의미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Z세대’를 합친 용어인 ‘MZ세대’는 오늘날의 젊은 세대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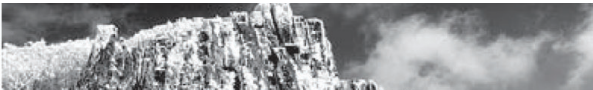
이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사용해왔으며 짧은 콘텐츠(숏폼)를 선호하고 개방적이면서도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 쇼핑, 모바일 결제, 스트리밍 서비스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소비에 익숙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MZ세대의 등장과 함께 요즘 세대의 정치적 참여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해 조직적으로 정치적 시위나 활동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정치적 이슈를 밍이나 숏폼 콘텐츠로 제작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고 활동했다면 MZ세대는 특정 정당보다 ‘이슈’ 자체에 집중하며 유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곤 한다.

일례로 #MEE TOO 해시태그 캠페인, 온라인 청원, 서



명운동 등의 온라인 활동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출한다.

이처럼 정치적 이슈를 콘텐츠화하면 단기간에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슈 중심의 참여 방식은 강력한 이슈가 없을 경우 정치적 관심이 쉽게 사그라들고 잊히는 경우가 많다.

자극적이고 짧은 이슈들이 주목받으면서 가짜 뉴스의 확산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뚜렷하게 확립하기보다 자극적인 기사나 여론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문제로 발생한다.

인류는 단편적인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에 익숙해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책임감 있는 태도와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단순히 유행처럼 새로운 이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문제의 본질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열정보다는 꾸준한 관심과 성찰을 바탕으로 정치적 참여를 이어 나가야 하는 게 급선무다.

조진웅 취재2부 기자

광주시 비상수송대책 너무 한가하지 않나

공공성 위해 전면 재점검 해야

광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광주 시의회 박필순 의원이 16일 광주광역시 의회 박필순 의원이 16일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노사 갈등의 조정 역할을 해 달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수일째 파업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연한 요구다.

시내버스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핵심 인프라다. 시내버스가 멈춰 서면 학생과 고령층, 저소득층 등 교통약자의 생활권과 이동권은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광주시의 경우 막대한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성과 안정성을 지키는 것은 광주시에 주어진 의무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도 이날 “승객 감소와 운송원가 증가 등을 고려해 준공영제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시내버스 파업이 더 이상 민간사업체의 노사분규가 아니라, 광주시가 주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공공의 역할이라는 뜻일 것이다.

지난 2006년 준공영제가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광주시의 정책은 비슷한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서울이나 부산과 달리 ‘사업자를 위한 준공영제’에 불과했다. 당장 광주시의 경우 서울이나 부산과 달리 운영평가나 감독 기능에 소홀했고,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낮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지원 방식도 차이가 크다. 광주시가 회사별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지만 서울과 부산은 수익금을 일괄 관리해 경영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 시민 편의보다 업체 위주로 노선을 관리하고, 시민 참여율이 낮다는 것도 광주시 준공영제의 한계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파업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서울이나 부산에서 운영하는 준공영제 모델이라도 배워와야 한다.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외부 감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노·사 양측의 사회적 책임 이전에 더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를 바꾸려는 광주시의 의지다. 시민의 불편이 한계에 이른 지금, 한가하게 ‘비상수송대책’을 대책이라 내놓는 광주시의 안일함이 한심하다.

재정위기 광주FC, 광주시가 개입해야

회계장부로 위기 덮을 수 없어

K리그 광주FC가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으로 1000만원 제재금과 선수 영입 금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는 3년의 집행유예를 달고 있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 제재가 현실화될 수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해를 넘겨 심화되고 있음에도 구단의 재무개선안은 번번이 이행되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수익을 과대 계상해 선수단 인건비를 무리하게 늘리는 등의 부실 경영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 광주FC 구단은 연맹 재무위원회가 승인한 개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2027년까지 자본잠식 상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광주광역시가 출자해 운영하는 시민구단의 특성상, 무능한 경영의 책임은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광주FC 구단은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이라는 명분 아래 수익 규모를 부풀리고 인건비를 증액해 적자를 키웠다. 이는 축

구단의 존립 목적과도 어긋난 행위이며, 프로스포츠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시민 자긍심 제고라는 본질과도 거리가 멀다.

이번 징계는 광주FC 구단에 내려진 첫 공식 경고장이다. 자칫 성적주의에 매몰된 채 재무 건전성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향후 승점 감점이나 하부리그 강등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무엇보다 광주시는 구단의 감시자이자 책임자로서 지금까지의 방관적 태도를 버리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 개입에 나서야 한다. ‘지속적인 세금 투입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체육진흥기금 의존도가 높은 K리그에서, 구단의 책임경영 체제 확립은 그 자체로 지역 스포츠 생태계의 생존 조건이다. 더 이상 회계장부만으로 위기를 덮을 수는 없다. 광주FC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지역의 품격이 걸린 공공 자산이기 때문이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